

OWNERS 오너스경영연구소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전문 기업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정책자금 가이드북

기관 선택부터 심사 기준, 승인 전략까지
현장 컨설턴트가 정리한 정책자금의 핵심

2026 EDITION

오너스경영연구소 · 추장호 팀장

상담문의 1668-5875 · ownerslab.kr

추장호 팀장

오너스경영연구소 · 정책자금 / 재무 컨설팅

주요 이력

- 前) 신용평가사 기업분석 담당
- 前) 이크레더블 TCB 평가위원
- 유니스트(UNIST) 기술경영학 석사
- 중소기업 재무 ·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력 다수
- 정부 인증 · 정책자금 · 세무 연계 종합 자문 경험 보유

이 가이드북은 정책자금을 처음 접하는 분도 전체 그림을 잡을 수 있도록 핵심만 간추린 자료입니다. 기관마다 기준과 예산 상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고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PART 1 정책자금이란 무엇인가

용자의 정의 · 직접대출 vs 간접대출

PART 2 정책자금 기관 완전정리

중진공 · 소진공 · 신보 · 기보 · 무보 · 농신보 · 재단 / 점포권 / 비교표

PART 3 기관별 심사 기준 — 얼마나 나오나

매출 · 신용 기준 한눈에 보기

PART 4 꼭 알아둘 핵심 개념

2차보전(이자지원) · 대환 · 성장단계별 자금 로드맵

PART 5 기술보증기금 심화 — '미래가치 자금'

담보가 아닌 기술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자금

PART 6 달라진 심사 기준 — 이제는 '정책 부합도'

2026년 신청 구조 변화 · 정책우선도 평가

PART 7 2026년 정책자금 시장 동향과 신청 전략

예산은 역대급, 준비된 기업이 가져가는 시장

상담 무료 · 유선 상담 안내

'정부 지원'이라는 말 안에 섞여 있는 것을 먼저 구분합니다.

정책자금 = '용자(대출)'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돕는 방식은 크게 **다시 갚지 않는 지원금**과 **갚아야 하는 용자**로 나뉩니다. R&D 지원사업, 혁신바우처, 고용지원금처럼 받고 돌려주지 않는 돈은 '지원금'입니다. 반면 우리가 컨설팅에서 말하는 '**정책자금**'은 **용자, 즉 대출**을 가리킵니다.

한 줄 정리

정책자금은 ① 정부기관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빌려주거나**, ②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게 해주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둘 다 '대출'이라는 점이 지원금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정책자금을 받는 길은 두 갈래 : 직접대출 vs 간접대출

같은 정책자금이라도 '**정부가 직접 빌려주느냐**'와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빌리느냐**'로 성격이 완전히 갈립니다.

① 직접대출 — 대표님 통장에 바로 입금

- 정부기관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입금합니다.
- 은행 수수료가 빠지므로 **금리가 낮습니다**(대략 2.5%로 시작).
- 운전자금 한도는 보통 **최대 3억 원**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 대표 기관: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간접대출 —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

-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 보증료 + 은행 수수료가 더해져 **금리는 높은 편**(대략 4.5%부터, 높으면 8%대도).
- 대신 **한도가 큼니다**(보증서 한 건으로 15억까지 받은 사례도 있음).
- 대표 기관: **신보·기보·무보·농신보·신용보증재단**

메인으로 쓰는 두 기관 = 신용보증기금(신보) + 기술보증기금(기보)

어떤 기관이 있고, 우리 회사는 어디를 쓸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직접대출 기관

-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저금리 직접대출의 핵심. 100% 온라인 접수로 전환되었고, 1차 심사는 AI가 전산 자료(파인드시스템·나이스평가정보)로 진행합니다. 신청 후 빠르면 1주, 늦으면 한 달가량 소요.
-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생계형 자금 중심. 신용취약자 전용자금, 대환자금 등. 최근에는 3천만~7천만 원대 자금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간접대출(보증서) 기관

- **신용보증기금(신보)** — 금융위원회가 운영. 업종 제한이 거의 없어 범용성이 가장 높은 '기업의 종합병원'.
- **기술보증기금(기보)** —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상. 제조업은 기본 가능, 비제조(IT·SW 등)는 특허가 핵심.
- **무역보험공사(무보)** — 수출 기업 전용. 수출 실적만 보고 자금이 나가는 구조.
- **농업신용보증기금(농신보)** — 농업 관련 업종 전용.
- **신용보증재단(지역재단)** — 지역 예산으로 운영. 소상공인 위주로 재편되는 추세.

점포권 — 어느 지역 기관을 쓸 수 있나

'점포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개념입니다.

구분	해당 기관	의미
점포권 있음 (고정)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사업자등록 시점에 관할 기관이 고정됩니다.
점포권 없음 (유동)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농신보	1~2시간 거리의 다른 지역 기관도 이용 가능(담당자 재량).

기관 한눈에 비교

기관	방식	특징	금리/한도 감각
중진공	직접대출	저금리, AI 1차심사, 정책우선도 평가	저금리 / 운전 ~3억
소진공	직접대출	소상공인 생계형, 대환·신용취약 자금	저금리 / 3천~7천만 다수
신보	보증서	업종 제한 거의 없음, 범용성 최고	중간 / 한도 큼
기보	보증서	기술·특허·연구소 기반 기업	중간 / 한도 큼
무보	보증서	수출 실적 기반(수출 필수)	실적 연동
재단	보증서	지역 운영, 소상공인 위주	1~2억 이하 다수

대표님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도록, 기관별 '대략의 기준'을 잡아둡니다.

먼저 알아둘 것

아래 숫자는 **기본 감각을 잡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업종·인증·신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예외 케이스(낮은 매출·낮은 신용으로도 진행)도 존재합니다. 절대 기준으로 외우기보다 '출발점'으로 활용하세요.

기관	대략의 기준	핵심 포인트
신용보증기금	매출 10억당 1억	업종 제한 거의 없음. 대표 신용점수 800점 이상, 크레딧 B- 이상이 기준선.
기술보증기금	매출 약 8억당 1억	제조업은 기본 가능. 비제조는 특히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사실상 필수.
무역보험공사	수출실적 10억당 1억	수출 실적만 평가. 신용점수 600점대여도 수출 실적이 있으면 가능.
중진공	정책우선도로 결정	고용창출·수출실적·스마트공장 시설자금 등 가점 항목 점수가 관건.
소진공·지역재단	3천~7천만 다수	소상공인 기준(제조·도소매·운수 5인 미만, 서비스업 등 소규모) 중심.

신용보증기금 — '기업의 종합병원'

- 사행성·유형업을 제외하면 제조·도소매·유통·운수·서비스업 등 대부분 진행 가능.
- 매출을 중요하게 봅니다. '**매출 10억 → 보증 1억**'을 기본 감각으로.
- 대표자 신용점수 **800점 이상**, 기업 신용등급 **크레딧 B- 이상**이 기준선.
-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이제는 **대표 본인과 기업의 신용 자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술보증기금 — 기술이 있으면

- 제조업은 '만드는 기술'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진행 가능.
- IT·SW 등 비제조업은 **특허**가 핵심. 기술은 있는데 특허가 없다면 특허 진행부터.
- 벤처기업 인증(혁신유형)·기업부설연구소 보유가 사실상 필수 요건.
- 매출 기준은 신보보다 낮아 **약 8억당 1억** 수준으로 봅니다.

무역보험공사 — 수출만 본다

- 다른 기관과 달리 정책우선도·이익률을 거의 보지 않고 **수출 실적만** 평가.
- **수출실적 10억당 1억**. 신용점수가 낮아도 실적이 있으면 자금이 나옵니다.

소진공·지역재단 — 소상공인 생계형

- 신용취약자 전용자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는 대환자금 등이 대표 상품.
- 최근 지역재단은 예산 축소로 1~2억 이하, 3천~7천만 원대가 가장 많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와, 기업 단계별 자금 그림.

2차보전(이자지원)

대출 금리의 일부를 정부·지자체가 대신 부담해 **실제 부담 금리를 낮춰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활용하면 직접대출·보증서 대출 모두 금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차보전을 '녹여서' 중진공 직접대출 2.5%, 신용보증기금 1.5%대, 보증서 대출 0.8%까지 내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대환(貸換)

한 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다른(더 유리한) 기관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예컨대 캐피탈 13%짜리 자금을 제1금융권 3%대 정책자금으로 옮기면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진공의 대환자금이 대표적입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 로드맵

정책자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이어지는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법인설립 · 연구소

STEP 2

자금조달(운전자금)

STEP 3

기업 인증 · R&D

STEP 4

시설확장 · 투자유치

STEP 5

가업승계 · M&A

초기에는 신용·기술로 운전자금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설자금·투자유치로 확장하며, 마지막에는 승계·매각까지 이어지는 그림을 미리 그려두면 자금 전략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기보는 '담보의 대체재'가 아니라, 기술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성장 자금입니다.

"부동산 담보가 없는데 기술력만으로 자금이 나올까요?" · "특허는 있는데 매출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 "보증료 까지 생각하면 일반 대출보다 부담이 크지 않나요?"

→ 기보는 단순 '담보 대신 보증'을 서주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기보가 '미래가치 자금'인 이유

- **매출이 없어도 가능성으로 평가** — 연구개발 단계라 매출이 없어도 기술성·시장성이 충분하면 지원 가능.
- **정부 육성 산업 우대** — 소부장(소재·부품·장비)·혁신산업 등 정책 방향과 맞으면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 **벤처기업 인증으로 연결** — 자금뿐 아니라 세제 혜택·병역특례 등으로 이어집니다.

기보 심사의 핵심 포인트

- 기보가 보는 기술력은 결국 '**사업이 되는 기술**' — 시장에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가.
- **현장 실사 비중이 큼** — 연구 인력의 실제 역할, 개발 시설, 대표의 사업 이해도까지 직접 확인.

기술평가·벤처인증 → 운전자금 확보 → R&D 성과 → 시설확장·투자유치

핵심은 기술을 금융기관이 이해하는 '**시장성·수익성의 언어**'로 번역하고, 정부 정책 방향과 기업의 강점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2026년부터 정책자금은 '신청만 하면 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빨리 접수한 사람이 아니라, '**정책우선도 평가**'(AI 사전심사)와 '**정책 부합도**'로 지원 타당성이 높은 기업을 먼저 선별합니다. 즉, '**신청 가능**'이 곧 '**대출 확정**'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예전 방식으로 접근하면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금, 신청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

자금 종류	2026년 신청 방식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 재도전 특별자금	매월 초 오전 10시 선착순 접수 (큰 변화 없음).
혁신성장 촉진자금	매월 → 분기별(7월·10월) 로 변경. 4월 첫 신청은 6분 만에 마감 — 10시 정각 준비 안 되면 끝.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선착순 아님. AI '정책우선도 평가' 사전심사 를 통과해야 서류 제출 자격. 격월 신청.

중진공 직접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정책우선도 평가의 커트라인이 작년보다 높아졌고**, 기업인증·수출·고용·고용유지 같은 요건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정책 부합도'란 무엇인가

- 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지원이 효과 있는 곳**'에 자금을 보냅니다.
- 회복·성장 가능성, 사업 계속 의지, **정책 목적과의 부합(인증·수출·고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정책우선도 평가(AI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본심사에 오릅니다. **통과 못 하면 서류 검토조차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책우선도 평가, 이렇게 준비하라

- 국세·지방세 체납, 4대보험(건강·고용·산재·국민연금) 체납 정리
- 카드·통신비·금융권 연체 해소 (신용 상태 회복세가 긍정적으로 반영)
-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정상화 + 최근 매출자료(국세청 카드매출·세금계산서) 확보
-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r.kr 등) — 신청 후 사후 이수는 불인정
- 인증·수출·고용 등 **가점 요소**와 **우대금리 요건** 미리 점검
- 자금집행계획 사전 작성 (사업과의 연관성 명확히)

반드시 기억할 것 — 실사 탈락 시 6개월 제한

한 번 **실사에서 탈락하면 동일 자금 재신청까지 6개월**이 막힙니다. 단, 같은 '거절'이라도 '**반려**'는 이 제한 없이 곧바로 재도전이 가능하므로, 통보를 받으면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립니다. 급하다고 준비 없이 넣으면 기회만 날립니다.

예산은 역대급이지만, '준비된 기업'이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추경으로 돈은 계속 풀리는데 정작 내 통장엔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시장은 작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흐름을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상반기

기관	무엇이 달라졌나
소진공	작년 선착순 창구 4시간 → 올해 5분 내 마감 (3월엔 2분). 신청 주기 월→분기. 집행도 지연(4월 신청분이 6월에도 미집행).
중진공	AI 정책우선도 평가 커트라인 상향 . 기업인증·수출·고용·고용유지 요건이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옴.
신보·기보	상반기 예산 4~5월 조기 마감 (KPI 조기 달성). 작년엔 요건 미달도 통과됐지만, 올해는 요건 좋은 기업이 예산을 싹쓸이.

시장의 한 줄 요약

"준비된 기업이 대부분의 예산을 가져가는 시장." 코스피 지수가 일부 대형주의 힘으로 오르듯, 정책자금도 '잘되는·준비된 기업'에 예산이 몰립니다. 나머지는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대기만 하다 끝납니다.

그래서, 자금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미리' 준비한다

개인 대출을 떠올려 보세요. 급해서 여러 곳에 신용조회를 돌리면 점수는 떨어지고 한도는 줄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아쉬운 사람이 많이 되는 구조**죠. 기업 대출도 똑같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미리 준비해 두면 낮은 금리로 원하는 타이밍에 조달할 수 있고, 이자비용이 줄어 재무제표가 좋아지며, 다음 조달이 더 쉬워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돈은 필요할 때 조달하는 게 아니라, 조달할 수 있는 상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금이 급하지 않을 때 미리 인증·수출·고용 등 요건을 갖춰 둔 기업은, 필요한 시점에 낮은 금리로 원하는 규모를 탈락·대기 없이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급해진 뒤 준비하면 조건도 불리하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5년 3회' — 타이밍이 곧 전략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5년간 **최대 3회**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3년차·매출 급증 시점에 받아야 할 자금이 각각 다릅니다.
- 이 **5년 3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 자금**도 있어, 단계별로 끼워 설계하면 더 많은 자금을 더 긴 기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가는 대표님과 그때그때 신청하는 대표님은, 5년 뒤 받은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의

예산·금리·심사 기준은 분기·회차마다 바뀝니다. 본 가이드의 수치와 동향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고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안내

정책자금은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로 결과가 갈립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어느 기관에 맞는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오너스경영연구소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 (온라인)

form.naver.com/response/slWoQWE7bpBlqL7ndD1_BA

대표 상담 문의

1668-5875

홈페이지

ownerslab.kr

오너스경영연구소 · 추장호 팀장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전문 기업 | 2026